

평화2.0포럼 in 광주

PEACE FORUM 2.0

G W A N G J U

새로운
남북 평화를 위한
담론과 실천

일시 2023. 5. 30(화) 13:00-18:00

장소 전남대 사회과학대 228호

주최 평화재단, 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조선대 동북아연구소, 한신대 한반도평화학술원

프로그램

* 전체 사회: 권영선 평화재단 이사

13:00-13:15	개회사
개회사	고경빈(평화재단 연구위원회 위원장) 주정민(전남대 사회과학대 학장) 기광서(조선대 동북아연구소 소장) 백준기(한신대 한반도평화학술원 소장) 김재관(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소장)
13:15-13:45	참석자 소개 및 전체 사진
13:45-15:15	제1회의: 새로운 남북평화
사회	고경빈(평화재단 연구위원회 위원장)
발제	한반도의 복합위기와 지속가능한 평화의 모색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권영선(평화재단 이사) 김재관(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현호(전남대 경제학과 교수) 백준기(한신대 평화학술원 원장) 이재훈(조선대 학술연구교수) 장창준(한신대학교 글로벌피스연구원) 최 선(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홍열(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원장)
15:30-17:00	제2회의: 남북평화를 위한 대외정책
사회	기광서(조선대 동북아연구소 소장)
발제	한반도 평화와 윤석열 정부의 외교 - 정부 출범 1년의 평가와 제언 남기정(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토론	강구섭(전남대 윤리교육과 교수) 김시원(전남대 경제학과 교수) 박상남(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심헌용(조선대 동북아연구소 학술교수) 이정철(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최영미(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홍용덕(한신대 평화학술원) 황재호(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17:15-18:00	폐회사 (법륜스님과의 대화)

개회사

고경빈(평화재단 연구위원회 위원장)

평화재단과 더불어 오늘 행사를 공동주최하는 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조선대 동북아 연구소, 한신대 평화학술원에 감사드립니다.

평화재단은 내년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지금의 활동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민간 학술연구기관의 연대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관이 한반도 평화 논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만 연대를 통하여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를 보다 무게감과 신뢰감 있게 전달하는 노력은 드물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민간 연구기관 연대를 통하여 한반도 평화 논의의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시도입니다. 뜻을 같이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도 필요한 시점에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면 늦은 감이 있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외교·안보 환경은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핵무장을 완성하고 핵전쟁을 거론하며 우리 안보를 심각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인내력도 소진되어 가고 있으며 더 이상의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전제하에 북한의 핵전력에 실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4월 한미 정상은 워싱턴 선언으로 북핵 대응에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마련되거나 거론된 어떤 대응책도 실효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한반도의 불상사를 전제하거나 이를 수반할 우려를 불식할 수 없습니다.

작금의 북핵 대응 논의는 일단 불상사가 발생하면 우리의 군사적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치중하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를 복원하려는 창의적이고 획기적이며 대담한 시도에 대해서도 절박하게 모색해야 합니다.

암에 걸릴 것에 대비해서 암 치료를 위한 첨단의료기기를 확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암에 걸리지 않게 평소의 건강유지를 위한 예방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반도 주변 환경도 30년 전과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2차대전 이후 한반도의 분단

과 전쟁을 초래했던 국제적인 냉전구조가 해체되면서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30년 만에 중요한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중 대립구도는 국제 정치와 경제 질서를 크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당장 한반도 안보와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어 안보외교와 경제외교 부담을 늘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북·중·러 관계를 강화하며 외교고립과 경제위기를 돌파하려고 합니다.

미국이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결합해 한·미·일 동맹체제를 구축하려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관계에 무리수를 두어 우리 외교 전략의 빈곤함을 드러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시험대에 오른 우리 외교는 역량 강화와 신뢰감을 높이는 창의적이고 실효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후위기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으며 통제 범위를 훨씬 넘어선 과학기술의 발전과 신종 전염병의 빈번한 확산 등 비전통 분야의 안보에도 소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이에 대응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최소한 이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시점입니다.

한반도 평화 논의에 기여하기 위한 민간 학술연구기관의 연대 노력이 이곳 광주에서 열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은 우리나라가 위기 속으로 빠져들 때 그 위기를 가장 민감하게 탐지하고 가장 먼저 용기 있게 대응한 전통이 깃든 곳입니다. 19세기 말엽의 동학혁명운동과 20세기 말엽의 광주민주화운동이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 상황을 명료하게 인식하고 용기 있는 대응을 위한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는 장소로 광주는 적절한 선택입니다.

모쪼록 오늘 논의가 우리가 한반도 평화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광서(조선대 동북아연구소 소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남대에서 열리는 이 공동학술 행사를 평화재단, 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조선대 동북아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오신 연구자 선생님들을 오랜만에 맞게 되니 한층 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갈등 등으로 인해 매우 불안한 정세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른바 난세라고 할 수 있는데, 난세에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세계를 모색하고 준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힘을 모아가자는 의견이 일치해서 오늘과 같은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시간은 아직 80년도 미치지 않지만, 이 기간에는 그 앞선 여러 세기의 역사를 집약할 만큼 수많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식민지에서의 해방과 분단, 전쟁 그리고 남북 대립은 지금까지 우리 삶을 억눌러 온 족쇄가 되어왔습니다. 한국 정치와 동북아 국제관계, 그리고 한국 현대사를 연구하는 모든 연구자는 분단 질서를 극복하고 남북의 정상적 관계 회복을 학자적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반도 정세와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풍토는 좀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고 보다 많은 실천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의 연구환경은 시대적, 이념적 제약성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여전히 일정한 벽에 갇혀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많은 신선한 아이디어와 문제 해결 방안은 제시되기가 무섭게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사장되는 상황이 되풀이되곤 했습니다.

한반도 정세와 국제관계는 그 범위만큼 엄청난 주제 분야와 수많은 주장이 나오는 영역이며, 이 모든 것은 수용을 통해 여과 없이 공론화의 장에 등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언론이나 비전문가 영역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제일 먼저 전문가들이 진실의 목소리를 드높일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자유의 보루였던 서구의 유력 언론조차도 보도의 생명인 객관성과 진실성을 잃어가고, 이에 따라 전 세계가 점차 흑백논리에 빠져들어 가는 인상을 줍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보도에서 드러나지만 한반도 국제관계에서도 여실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거나 그 반대의 현상은 그 교묘함으로 인해 점차 일반이 본질을 꿰뚫기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자기 터전에서 진실의 목청을 높여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가지는 감상이지만 학술행사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자들의 참신한 논의와 주장이 현실에 접목되어 실천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시도를 부단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학술회의에서 동북아시아 정세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와 논의를 통해, 한반도가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상호 협력과 대화를 통한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큰 노력과 희생을 통해 얻어낸 평화의 기반을 지키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오늘 이 행사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얻은 영감이 지식과 논의의 재생산에 큰 도움이 되는 기반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참여하신 모든 선생님을 다시 한번 열렬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관(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소장)

안녕하세요? 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소장 김재관입니다. 오늘 평화재단, 조선대 동북아연구소, 한신대 평화학술원, 그리고 저희 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새로운 남북평화를 위한 담론과 실천”이란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를 위해 경향 각지에서 먼 길 마다하지 않으시고 참석해 주신 평화재단, 한신대 평화학술원, 조선대 동북아연구소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지난 시점에서 현재 남북 관계는 문재인 정부 시기와 비교해 볼 때 한층 더 경색되었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요원해지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의 안보 위기는 날로 심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질서는 신냉전과 블록화 대립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중 간 치열한 전략 경쟁 과정에서 한국의 외교적 경제적 입지와 재량권은 한층 더 축소, 고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대미 일변도 외교와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의 강화로 말미암아 한·중 관계는 물론이고 한·러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마저 악화일로로 치달고 있습니다. 급기야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해협 위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러 권위주의 세력의 억지 등을 빌미로 나토와 인도 태평양을 묶는 복합 네트워크 체제 구축해 중·러 세력을 이중 봉쇄하고 있고, 이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는 준동맹에 가까운 전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반도 주변에는 한·미·일 해양 세력과 북·중·러 대륙 세력이 집단으로 대치하게 되어,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 집권 1년이 지난 이때 한반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유관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남북평화를 위한 담론과 실천”이란 주제로 학술회의를 갖는 것은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 함의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 준비에 처음부터 만전을 기해주신 한국 외국어대 황재호 교수님을 비롯해 평화재단 고경빈 위원장님, 조선대 기광서 소장님, 한신대 백준기 원장님 그리고 옥고를 발표해주신 남기정 교수님과 조한범 박사님, 그리고 코리아컨센서스 연구원 이사장님이신 한홍열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토론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마지막 세션 강연을 맡아 이 회의를 풍성하게 해주신 평화재단 이사장님이신 법륜 스님께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남북평화를 위한 담론과 실천”의 소중한 밑알을 낳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개회식 인사에 갈음합니다.

제1회의:
새로운 남북평화

한반도의 복합위기와 지속가능한 평화의 모색

조한범(통일연구원)

1. 전통안보의 부활

안보(security)의 어원은 자유와 불안, 공포, 위험을 뜻하는 securitas 이며, 불안, 공포,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오랫동안 국가는 안보의 핵심 주체이며, 영토, 국민, 주권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국가안보로 해석되어 왔다. 제1, 2차 세계대전과 글로벌 냉전체제는 군사력에 기반을 둔 국가안보 개념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체제 붕괴로 인류는 3차 세계대전과 핵전쟁의 위협이 소멸했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국가 중심의 안보는 정치, 경제, 사회, 생태환경 등으로 영역을 확장했으며, 비전통안보(non traditional security), 신안보(new security),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 그리고 인간안보(human security) 등 새로운 안보 개념이 탄생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 착시였으며, 역설적으로 탈냉전기 국제적 또는 지역 분쟁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유고슬라비아 내전, 체첸, 조지아,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등 구소련권 국가들 간 갈등과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대규모 국제전인 걸프전쟁이 발발했으며, 시리아와 예멘의 내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간기는 사실상 종식을 고했으며, 유럽 전역은 전쟁의 여파에 휩싸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황이 불리할 때마다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으며, 독일 등 나토의 핵심 국가들은 빠른 기간 내 GDP 2%까지 국방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로 아시아지역의 안보상황 역시 불안정하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영토분쟁 및 긴장고조로 역내 국가들은 군비증강에 주력하고 있으며, 일본은 반격 능력을 명분으로 안보 전략을 공격적으로 변화시켰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공공연히 회자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반도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과거 북한은 핵문제는 북미 간의 사안이며, 자신들의 핵무장은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인 동시에 남한의 동포들을 보호해 준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2022년 9월 북한은 핵선제공격을 명문화한 핵교리를 법제화했으며, 이후 남한의 주요 시설, 항구, 비행장 등을 상대로 모의 핵공격 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핵공격 위협을 받는 유일한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워싱턴 선언으로 가공할 위력의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전개된다. 한반도는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사는 세상이다.

2. 인류세(Anthropocene)의 생명안보(Life Security)

냉전기 인류는 종말론의 화두를 안고 살았다. 당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핵강대국들은 인류문명의 소멸을 초래할 수 있는 천문학적 규모의 핵무기를 보유했다. 1961년 소련은 폭탄의 황제라는 뜻의 수소폭탄 ‘차르봄바’를 실험했으며, 그 폭발력은 TNT 5,000만 톤 규모였다. ‘차르봄바’의 폭발지점에서 100km 거리에서도 3도의 화상을 입는 수준이었으며,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탄 ‘리틀보이’의 위력은 15,000톤이었다. 냉전기 미국의 주력 다탄두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피스키퍼의 경우 475kt, TNT 47만 5,000톤 규모의 핵탄두 10발 가량을 탑재했다. 피스키퍼 하나로 한 나라의 주요 도시를 모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었다.

이제 인류는 새로운 종말론을 마주하고 있으며, 이는 인류세라는 상징적인 신조어가 탄생한 배경이다. 지난 3년여간 인류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팬데믹의 공포 속에 시달렸으며, 7억여 명의 감염자와 700여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온 지구촌이 하나로 연결된 초연결시대보다 치명률이 높은 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는 인류세라는 신조어가 탄생한 직접적 배경이며, 현재와 같은 탄소배출과 기온상승을 막지 못할 경우 인류 전체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경고다. 북극해에서 남극해까지 전 세계의 바다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으로 덮여 있으며, 오염된 수산물의 최종소비자는 인간이다.

당면한 위협의 성격에 따라 안보의 주체는 국가에서 인간으로 변해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당면한 위협은 개별 국가, 지역, 민족, 개인 차원이 아닌 인류 전체가 대상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생명안보는 바로 이 같은 점에 주목하는 개념이다. 생명안보는 종으로서 인류가 생물학적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해 인류의 지속 가능한 생존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생명안보의 위기는 자연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닌 인류 스스로 만들어 낸 인위적 성격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생명안보 위기에 대한 인류의 성찰과 각성이며, 초연결협력(hyper-connected cooperation)이다. 생명안보 위기의 근원이 인류가 걸어온 발전의 경로 그 자체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인류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통안보의 시대, 분열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인류에게 생명안보는 협력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3.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속 가능한 평화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에 의존한 체제수호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핵무기는 개발과 유지에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미래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세계 최대의 핵강국 소련이 속절없이 무너졌으며, 핵무기를 보유한 파키스탄이

한 번의 홍수 앞에 국가적 위기를 겪는 역설을 곱씹을 일이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고집할 경우 자원분배의 왜곡과 인민경제의 희생을 피하기 어렵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한미는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으로 맞서고 있으며,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B-52H전략 폭격기와 항모전단이 수시로 한반도에 전개되는 등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의 일상은 점점 위기에 대한 익숙해져가고 있으며, 한반도의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감각이 무뎌져 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반도의 안보위기에 대한 사이다성 발언이 난무하고, 자체 핵무장론이 여론을 압도하는 현실이다. 청년 실업은 이미 오래된 문제이며 치솟는 물가에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경쟁력은 하락하고 있다. 경제살리기에 나서야할 상황에서 안보 투자의 증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세계 3대 경제권 중 가장 역동적인 한·중·일은 생명안보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중국은 탄소배출 세계 1위이며, 한국과 일본은 발전과정에서 이미 많은 탄소를 배출했다. 한·중·일은 세계 원자력 발전소의 1/4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세먼지와 황사라는 공통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국과 일본까지 오는 데 걸린 시간은 한 달 남짓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아프리카돼지열병, AI, 솔잎혹파리병 등 바이러스와 전염병은 군사분계선을 자유롭게 넘나든다. 남북은 공유하천으로 조밀하게 연계된 하나의 생명공동체다. 한·중·일과 남북이 생명안보 위기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다.

전통안보의 부활과 인류세의 생명안보 위기, 복합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당장 고조되는 북핵위기를 해소하고, 생명공동체로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다자협력을 견인해내는 것이 당면과제다.

한반도 평화의 입구를 형성하기 위한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할 때다. 북핵 문제 해결의 복합성과 장기성을 고려해 비핵화의 입구를 마련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남·북·미는 이미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하노이에 이르는 남·북·미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협상 가능성을 모색한 바 있다. 다시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의 비핵화 로드맵을 가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경제위기가 악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게도 협상의 필요성은 상존한다. 동시에 역내 생명안보 위기 해소를 위한 한·중·일 공동의 협력을 견인할 때다. 새로운 한·중·일 관계는 과거가 아닌 미래에서 찾아야 하며, 이는 당면한 인류 공동의 위기에 대한 협력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생명안보의 위기는 연성이슈라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도 충분히 협력이 가능하다. 생명안보 이슈에서 출발해 새로운 신뢰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평화운동은 전통안보와 생명안보 두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하며, 위협의 초연결성을 고려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당면한 위기에

대한 국가주의적 대응의 한계를 넘어 한·중·일 시민사회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새로운 시민운동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명안보 위기의 해소는 종으로서 인류 전체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권영선(평화재단)

2차대전 이후 냉전과 탈냉전을 거치면서도 그럭저럭 작동해온 국제질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른바, 유엔체제는 무능력과 불능의 상태를 보여준다. 2022년 2월부터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의 동진과 과거 러시아 세력권의 확보라는 제국주의적 적대의 산물이다. 현재 국제질서 변화의 핵심은 새로운 세계질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현재의 동북아정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선 여야의 정쟁만큼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동북아정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아래에서 북핵에 대한 북한, 국제사회, 한반도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축약해보면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2017-2019	2020-2023
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륙간탄도미사 • 6차 핵실험(2017) • 비핵화 가능성과 북미협상에 대한 희망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이후 ICBM, 극초음속, 화성-17형, 일본을 위협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화성-12형 발사 (소형화, 양산) • 2022. 9. 8 핵을 '국체'로 선언한 '핵 정책 법령'의 발표 (핵 포기 불가) • 대만 문제에서 중국 지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옹호. • 비핵화와 북미협상을 거래할 의지가 없음.
국제 사회 (미일 중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비핵화 기조 • 중국/러시아는 북한의 유엔 대북제재 동참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에서 북한의 추가 제재를 반대. (미국 책임을 거론). • 2021년 미국의 오키스(AUKUS) 출범과 4자안보협의체 쿼드(Quad)의 위상 격상. • 진영 간 격돌과 우크라이나 전쟁 • 이념대립의 확증편향 •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14개국 공급망 협정(무역, 공정, 청정경제는 협상 중), 칩4동맹 (중국 배제)
한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정상회담 (3회) • 북미정상회담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중러 vs 한미일’ 구도(New Cold War-Cold Peace) • 한일군사비밀정보협정 재개,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칩4동맹에 한국 참여 • 현 정부의 가치동맹-“21세기 냉전의 핵심은 이념과 체제, 동맹의 기준은 이념”(이상우 신아연 이사장) • 미중이 격돌하는 최전선

정치는 흑백지대, 외교는 회색지대라고 하지만, 현 정부의 외교안보는 온통 흑백영화다. “현재 미중대결은 핵 균형을 고려할 때, ‘차가운 평화(cold peace)와 신냉전 구도 어딘가에 놓여있다”(문정인)는 진단처럼 한국의 외교안보는 어느 쪽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선

택할 수 있는 전략이 전혀 달라진다.

텍스트(문자)가 아닌 콘텍스트(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조심스럽지만, 발제문에서 강조한 “생명안보 위기에 대한 인류의 성찰과 각성, 그리고 초연결협력”은 좀 더 구체적 예시로 보완되었으면 한다. 또, ‘한중일 시민사회가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새로운 시민운동의 모색’이라는 발제자의 제안은 의미는 있지만, 구체적 가능성을 현실에서 발견하기 어렵다. 새로운 시민운동을 고민하는 주체들이 직면하는 공통의 문제는 이를 구체화할 ‘실행 동력과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나갈지는 앞으로의 숙제일 것이다. 한반도에서 ‘평화로 가는 시계’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언제 ‘특’ 돌발사태가 터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중 강대국 어느 한 편에서 대리전을 치르거나 경제적 희생을 치러야 하는 국제질서의 불평등을 비판하고, ‘평화와 공정(상호 호혜)’에 기반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조직화하기 위해 두 가지를 검토했으면 한다.

첫째, 미국과 동맹관계면서 경제적으로 중국과 밀접한 교역국들 이른바 ‘샌드위치국가들’(호주, 독일, 프랑스 등)간의 연대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가령, 다자간안보협력체제와 세계 무역기구(WTO)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다.

둘째, ‘평화와 공정(상호 호혜)’을 기치로 내거는 새로운 시민운동, 이른바 한중일의 선진 시민들과 샌드위치 국가들의 시민이 함께 혹은 따로 같이하는 운동을 모색해보는 방안이다.

결론적으로, 북핵 해법은 줄탁동시가 필요하다. 즉, 한반도 평화의 뇌관인 ‘북핵 해법’은 남남통합을 견인하는 시민사회의 과제와 북미수교에 버금가는 동북아정세의 변화(한반도 평화체제를 인정)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전통안보의 관점에서 정부 주도 한미일 동맹과 중국 및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병행하는 축과 생명안보의 관점에서 민간 주도 동북아생명공동체(한중교류, 남북교류, DMZ이벤트) 및 새로운 글로벌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축이 요구된다.

전자는 정부와 정책담당자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중요할 것이고, 후자는 진영과 이념, 국가를 넘어서는 통합적 시민운동의 추진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민운동이 가능하려면 핵을 가진 북한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는 통합된 합의가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글로벌 공동체는 전례 없는 소위 ‘복합위기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인류는 기후변화, 코로나 팬데믹, 핵확산 위협, 테러리즘 공포, 배타적 인종 및 민족주의 갈등, 다문화 갈등, 문명충돌, 글로벌 신자유주의 부작용에 따른 양극화와 민주주의 위기, 글로벌 패권경쟁의 돌풍 등을 겪고 있다. 게다가 21세기 중국의 글로벌 부상으로 야기된 미중 전략경쟁은 복합적 상호의존 시대의 세계 각국을 진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블록화로 내몰고 있다. 설상가상 2022년 터진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를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진영 세력과 러시아·중국을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 진영 간의 ‘대리전’ 성격을 띠면서 전통 안보 문제를 재점화시켰다. 그 글로벌 파장은 블록화의 신냉전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복합위기의 시대에 미국은 기존의 세계질서, 즉 미국 주도의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와 자유무역 질서가 오히려 중국의 글로벌 강대국화를 낳음으로써 미국의 패권에 심대하고 근본적인 도전을 야기시켰다는 부정적인 초당적 결론을 내리고 이제 새롭게 ‘미국 우선주의’에 부합하는 새로운 워싱턴 컨센서스(New Washington Consensus)를 만들고 있다. 즉 중국의 도전과 위협을 억지시키기 위해 미국의 전략적 산업, 가령 반도체, 클린에너지, AI, 양자 컴퓨팅, 생명공학, 우주 산업 등 분야에서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개입 정책과 새로운 무역 규범을 만들어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기존 자유무역 규범은 허물어지고 되었고, 국가 간 무역장벽과 갈등은 더 심화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치달고 있다.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근본적 도전들, 글로벌 지정학적 대결, 미중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말미암아 바이든 정부는 외교 안보 통상 정책의 전면적 수정을 가하고 있다. 나토 재규합과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 확대 강화, 반도체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등은 한반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한반도의 평화 질서와 경제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형국이다.

요컨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대상으로 한 ‘이중 억지’(dual deterrence) 혹은 봉쇄하겠다는 안보 구상은 결국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엮는 초지역 연합 안보 프레임, 가령 AUKUS, QUAD, 한미일 삼각안보강화, 한미일 호주 통합 미사일 방어망(IAMD) 구축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 태평양 전략,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첨단 반도체 분야 규제 등은 한국의 외교 안보 통상 자율권을 제약하고 한국을 양자택일의 길로 내몰고 있다. 결국은 미국의 외교안보통상 전략과 정책이 독립변수가 되고 한국은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종속변수로 전락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의 외교안보통상 전략의 변화 속에서 한미일 삼국의 안보

및 경제 협력 강화에 맞서 북중러 협력도 동시에 강화되는 대결 국면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위기가 한층 더 구조화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

다행스럽게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의 블록화 편 가르기 (이번 G7 정상회담 등) 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두 개의 진영으로만 나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속에서도 자국의 국익에 따라 재량권을 발휘하려는 제3 중간 지대 위협회피 국가(Middle Hedging), 浮動국가(swing state) 들이 합종연횡하며 각자도생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EU 존의 독일, 프랑스라든가, 글로벌 사우스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 브라질,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등의 독자 행보라든가 BRICS, SCO 등의 재량권 행사는 세계의 다극화 추세도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이 자국의 국익에 따라 블록화를 주도하고 있지만 세계는 다극화, 다자주의 추세를 동시에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윤 정부 1년을 돌이켜보면, 한국 외교는 전략적 균형을 상실한 채 대미일변도 외교로 자발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일방적으로 굴종 추수하는 외교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미중 전략경쟁이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고 중러 간 연대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필자는 솔직히 한반도 평화와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다. 한반도 주변 글로벌 파워 세력 간 대결이란 구조적인 변수가 너무나 크게 한반도 평화 질서를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비관적 전망 속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만이나 한반도의 우크라이나화(대리전)을 우려하는 것은 어찌면 우리의 지정학적 운명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위기 시대 선진국으로 도약한 우리 한국의 성숙한 시민 역량의 역할을 기대해본다. 이미 여야를 막론하고 형편없는 정치권에 기대할 것은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견인할 협력 체제의 구축 가능성을 모색하는 글이다. 이를 위해 이 발제문에서는 전통안보와 '생명안보'의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북핵 문제로 대표되는 전통안보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의 해결이 갖는 복합성과 장기성을 고려하여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의 비핵화 로드맵을 가동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생명안보 위기의 해소를 위해 동북아 내 다자간 협력 관계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전통안보의 측면에서 북핵이 가지는 위협성과 치명성, 생명안보의 측면에서 인류의 생물학적 생존을 위협하는 다양한 현상들의 긴박성은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는 해결 방안의 모색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발제문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발제문에 제시된 문제의 본질적 원인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발제문에는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의존전략과 관련하여 핵무기가 “개발과 유지에 천문학적 비용이 소용되”기 때문에 “북한의 미래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북한이 추구하는 전략이 가지는 불합리성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체제수호’를 위한 궁극적인 무기체계의 강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미국을 비롯한 외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한 북한의 상황에서는 결코 경제적인 수단은 없지만, 핵무기에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요컨대 이 문제는 ‘체제수호’를 위한 핵무기 개발 및 유지에 소용되는 비용과 동일한 경제비용을 재래식 무기에 투자해서 북한이 핵무기 보유와 동일한 ‘믿음직한’ 방어력을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전통적 강국들이 미국의 공격에 허무하게 무너져버린 경험을 통해 강화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만약 상대방에게 무조건적 굴복과 포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핵무기 개발 및 유지의 경제성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신뢰’의 구축일 것이다. 요컨대 북한과 그 상대방인 한국 및 미국이 상호 신뢰를 주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경제성을 논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신뢰는 수월하게 구축되지 않을뿐더러 영구적이지도 않다. 예를 들어 1990년대 북핵 문제가 표면화된 이후 한미 양국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북한은 냉탕과 온탕을 교차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곤 하였다. 이러한 상시적인 외부 환경의 변화를 보면서 북한이 신뢰감을 가질 수 있었을까? 또한 냉전 시기 핵 강대국이었던 우크라이나의 예에서도 보듯이 30여 년 전에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단행했던 핵 포기는 현재 우크라이나의 불행한 상황과 연결되

어 있다. 신뢰가 구축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영속적이라고 보장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복핵은 해결하기에 난감한 문제이다. 어찌 보면 이미 늦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결의 노력을 멈추기에는 그 직간접적인 후과가 너무나 치명적이다. 해결을 위한 보다 많은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1. 한반도 복합위기

○ 연루

- 우크라이나 전쟁 : 연루의 가능성 증대
- 대만 등 미중 전략 경쟁 : 연루의 정도

○ 한반도 안보 패러독스: 안보와 안보부재 공존

- 북미 핵공방 : 안보 상태 下 핵과시 경쟁(북미 버티기 전략)
- 남북 군사적 충돌 : 충돌 가능성 고조

2. 한반도 지속 가능한 평화

○ 한반도 평화의 정의

- 북미 : ‘핵·미사일 vs 군사연습’ 동결(평화의 회복)에서 관계 개선으로

“Convinced that the establishment of new U.S.-DPRK relations will contribute to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and recognizing that mutual confidence building can promot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남북 : 군사적 적대 행위 중단(평화의 회복)에서 정치적 적대 행위 중단으로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
 -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 중단 /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 왕래와 접촉 활성화 군사적 보장대책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 남북 불가침 재확인, 준수 / 단계적 군축 / 종전선언과 평화협정(4자회담) / 한반도 비핵화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

○ 한반도 지속 가능한 평화



- 평화의 회복에서 ‘도로 회귀’ 과정의 반복 탈피
- 북미 지속 가능한 관계 정상화 + 남북 지속가능한 합의 이행

이번 회의의 주제인 ‘새로운 남북평화’, ‘지속가능한 평화’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평화’가 무엇인지 명확할 필요가 있다. ‘평화’의 사전적 정의는 ‘평온하고 화목함’, 또는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또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평화를 ‘평온하고 화목함’으로 정의하는 것은 상당히 광의적이어서 각론의 필요성이 불가피하고,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하기에는 상당히 협의적이어서 기타 인간을 위협하는 폭력이나 박탈 등의 과제에 소극적이게 된다.

그렇다면 ‘평화’를 적절한 수준에서 객관화해서 이해할 수는 없을까. 그 대표적인 사례로 호주의 국제관계 전문 싱크탱크인 경제평화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는 전 세계 160여 개국의 평화 수준을 평가해서 ‘세계평화지수’(Global Peace Index) 보고서를 거의 매년 발간하고 있다. 2022년 세계평화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43위(1.779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2021년 보고서에서의 57위(1.877점)보다 14계단 상승한 것이다. 이는 총점 1점에 가까울수록 평화롭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므로, 2021년 대비 2022년에 한국은 상대적으로 평화 지표들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¹⁾

세계평화지수의 평가 지표는 ‘진행 중인 대내외 분쟁’(Ongoing Domestic & International Conflict), ‘사회적 안전 및 안보’(Societal Safety & Security), ‘군사화’(Militarisation) 등 3개 영역에서 23개의 세부 지표를 선정하여 계량화한 후 국가별 점수를 산정한다. 2022년 보고서에서 한국은 ‘진행 중인 대내외 분쟁’은 1.853점으로 105위, ‘사회적 안전 및 안보’는 1.499점으로 12위, ‘군사화’는 2.224점으로 142위로, 총점 1.779점으로 전체 163개국 중에서 43위를 기록했다. 분단의 현실과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진행 중인 대내외 분쟁’과 ‘군사화’ 지표의 낮은 점수의 불가피성을 감안한다면, ‘사회적 안전 및 안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안전 및 안보’에 대한 체감지수는 보고서와 달리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해당 영역의 주요 지표는 범죄의 정도, 난민 수, 정치적 불안정, 테러, 살인 및 강력범죄 수준, 폭력시위, 수감자 비율, 경찰 비율 등이다. 이는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사회적 갈등, 사회 고위층의 특혜, 비리, 탈법, 사회적 안전망 및 위기대응 시스템 등에 대한 지표가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이 높아지는 한국사회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1) 2018년 이후 해당 보고서에서 나타난 한국의 평화지수 순위는 2018년 49위(1.867점), 2019년 55위(1.867점), 2020년 48위(1.829점), 2021년 57위(1.877점), 2022년 42위(1.779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의 요인들로 한국 국민들이 느끼는 불평등과 불공정에 의한 박탈감, 고위층 비리와 특혜에 대한 혐오감, 국가적 위기대응 시스템에 대한 불신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지표가 포함된다면 한국의 '평화지수'에 대한 평가는 낮아질 것이고, 이는 예상보다 한국의 대내적 안보의 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국가적 수준의 전쟁과 분쟁, 갈등이 안보의 주요 요인이므로 현명한 대응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최근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차원의 갈등과 불신, 불안 등의 수준이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가능한 '평화'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잊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동시에 해야 할 것이다.

제2회의:

남북평화를 위한 대외정책

한반도 평화와 윤석열 정부의 외교 - 정부 출범 1년의 평가와 제언

남기정(서울대)

1. 윤석열 정부의 외교 목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관련 국정과제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핵심어로 제시되었다. 거기에는 남북관계 정상화와 이를 통한 평화의 한반도 실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한다는 목표가 제시되어 있었다.

강력한 대북 제재, 한미일 3국간 공조, 북한 주민의 인권 인도적 상황 개선,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진화와 한일 셔틀외교의 복원, 인태지역으로의 외교지평 확대, 가치외교 파트너십 강화 등이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북한 비핵화와 남북미 안보대화 채널,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기반으로 한 미중일러 협력 강화 등은 공약(空約)이 되었고, 과거를 직시하는 한일관계,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 노력, 유라시아 공동번영 등의 과제는 후퇴했으며, 아세안 등과의 상생연대 구축, 지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 등의 과제는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윤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동시에 추구하기 어려운 외교 목표가 나열되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가치외교’를 전방위에 내세우며 한일/한미일 관계에 올인한 나머지, 그에 대한 반사효과로 나머지 과제들을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현실이다. 나아가 ‘능동적 경제안보’의 과제는 미일에 끌려가는 수동적 경제안보로 전락하여 경제위기를 낳고 있고, ‘글로벌 중추국가의 국격’에 어울리는 자리에서 내려와 미일동맹의 하위 행위자로 편입되고 있다. 한편 윤 정부의 국정과제에 강제동원, 일본군‘위안부’, 수출규제 등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2. 한미일 올인 외교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21일 서울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려 한미동맹을 ‘포괄적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강화할 것을 천명했다. 그로부터 꼬박 1년 뒤 2023년 같은 날(5월 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린 G7을 무대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는 것은 우연치곤 매우 상징적이다. 2022년 6월 27-30일에는 나토정상회담에 참석해서 한미일 정상회담(29일)을 가졌으며, 이는. 나토의 중국견제와 러시아 비판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했다.(박원곤) 9월 21-22일에는 제77차 유엔총회에 참석하여 기조연설 “자유와 연대: 전환기 해법의 모색”을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 그렇게 해서 얻은 한미, 한일 정상과의 짧은 회동은 ‘바이든, 날리면’ 발언과 ‘클린치 외교(抱きつき外交)’의 오

명으로 남았다.

9월 27일에는 한덕수 총리가 아베 국장에 참석해서 28일 기시다 수상과 회담을 가졌다. 11월 11-13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담에서도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려 '한미일 프놈펜 성명'이 발표되었고, '자유 평화 번영의 한국판 인태전략 선언'이 나왔다. 12월 말에는 한국판 인태전략이 발표되었다. 2023년 1월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려, '제3자 변제' 방침에 대한 정부 입장 설명이 있었고, 이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확인되었다.

'성의 있는 호응'을 최소한의 조건으로 일본의 행동을 요구했던 피해자들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답이 3.1절 기념사였고, 3월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의 입장 발표였다.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이 열려, 과거사 문제를 봉인한 채 한일,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 강화 방침이 확인되었고,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이 열려 '워싱턴 선언'이 나왔다. 5월 7일에는 기시다 총리의 전격 방한이 실시되었고, 5월 21일 히로시마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던 것이다.

이와 같이 윤석열 정부 1년의 한국외교는, 윤 대통령 스스로 자부하듯이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에 올인하여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이미 실질적으로 전략동맹으로 강화되던 한미동맹을 가치동맹의 미명하에 무제한동맹으로 확대강화하고,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통을 겪고 있던 한일관계를 안보파트너십으로 재규정하여, 역사불문-협력강화의 1965년 체제로 복귀시키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그 과정에서 도청의 책임, 식민지배의 책임은 묻지 않았다. 물론 그 외의 실익도 제대로 챙긴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3. 허구의 신냉전, 위기의 일상화

이 모든 것이 다가오는 북핵 미사일 위기와 중국의 공세적 외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되는 신냉전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며, 이를 위해서는 '실익'이라는 '소탐'을 경계하고 '가치'라는 대의를 취해야 한다는 논리로 포장되어 있다. 그리하여 권선징악의 전사로 나서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은 조심스럽게 신냉전 회피를 모색하고 있으며, 세계는 권위주의 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전쟁보다는 G7의 위상 약화와 균열, 북중러 사이의 불안한 협력, E7의 등장 등을 특징으로 하는 완만한 삼분지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히로시마 G7은 위상 약화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확대의 경향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G7은 1990년대 세계 GDP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20년대 들어 30%로 줄어들어 세계 경제에서 지도력 약화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히로시마에는 한국과

함께 호주,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초대되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G7 내에서도 조금씩 편차가 보이기 시작했으며, 확대 G7에서 그 간극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는 정전체제로 회귀하여 동북아 위기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가운데, 위기가 일상화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가짜 평화’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반일’에 몰두했다는 인식이 배경에 있다. 한미연합훈련 정상화와 한일관계 정상화의 두 가지 정상화라는 목표가 설정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윤석열 정부의 ‘정상화’는 한일관계에 앞서, 국방안보 분야에서부터 개시되었다. 2022년 7월 22일,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 조정 폐지된 전구급 연합훈련 부활 방침을 보고하고 한미연합훈련 ‘정상화’에 돌입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속에서 중단되거나 축소되었던 전구급 연례 한미연합연습, 키리졸브, 독수리,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등을 ‘정상화’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더해 림팩에 역대 가장 큰 규모의 훈련단이 참가했으며 이에 연결해서 실시되는 ‘퍼시픽 드래곤’에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와 함께 참가했다. 그 성격도 공세적인 것으로 변화했으며,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연합훈련’이 실시되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맞대응이 일상화되었고, 중국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이어서 한일관계 ‘정상화’가 시도되어, 식민지배 책임 문제라는 돌덩이를 치우는 결단을 내렸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가짜 평화’로 규정하고 비난하는 윤 정부는 한일 ‘가짜 화해’를 통해 ‘유사 동맹’을 ‘진짜 동맹’으로 탈바꿈시키려 하고 있다. 마침 일본은 ‘극동 1905년 체제’를 핵심어로 하는 ‘새로운 지정학’을 준비해 놓고, 한국이 이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고 있다.

4. 디커플링 아닌, 디리스크

그 이면에서 중국은 경제적 위상이 제고되는 것을 배경으로 정치적 위상도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화해시켰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그 경제적 위상은 더욱 확고하다. IMF는 2023년 세계 경제성장에서 중국 비중을 34.9%, 인도가 15.4%, 미국을 포함한 서반구 기여도는 이보다 작은 13.7%로 이 경향은 향후 지속될 것이다. 2028년에는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가 G7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G7에 대신해 새로 주목받고 있는 E7(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터키, 브라질, 멕시코)의 GDP는 2030년에 G7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배경으로 G7은 대중 탈동조화(decoupling)보다 탈-위험화(de-risk)를

시도하는 것 같다. 탈-위험화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제 교류의 부분적 차단을 시도하는 것으로, 공동성명에서 채택된 중국에 대한 비판의 수준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오히려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가 주목되었다.

G7에서는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들 국가들에게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이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다. 2022년 10월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 이후 재빠르게 중국을 방문한 숄츠 독일 총리, 2023년 3월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중국과의 탈-위험화를 언급했다. 4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및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방중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정작 미국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4월 25일 옐런 재무장관이 미중간 밀접한 상호의존 상황에서 탈동조화의 위험을 언급하고 있으며, 2022년 상무국 산업보안국은 대중 제재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 요청 중 약 69.9%를 승인했다. 대중 제재 목록에 있는 미국 첨단 제품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중국에 수출되고 있는 것이다.

5. 위기 극복을 위해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에게 한미일 삼각동맹의 전위로 나서서 얻게 될 ‘위험수당’에 올인하면서 중국과의 탈동조화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보이지 않는다. 한미일의 위계적 분업구조 부활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군사압력 일변도의 대북 외교를 수정해야 하며, 경제위기로의 입구에서 탈출하려면 한중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새로 국제정치 무대로 등장하는 ‘글로벌사우스’ 외교를 구상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신국제질서 구축의 주체로 나서야 할 것이다.

○ 한반도의 복합 위기와 지속가능한 평화의 모색: 위기 속에서 기회 만들기

- 발제문을 통해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 세계의 안보위기 상황에 대한 조망을 가질 수 있었음. 특히 전 세계가 상호 연계되어 한 지역의 위기가 개별 지역 차원을 넘어 전체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적절히 제시되었음. 더 나아가 위기가 군사 측면을 넘어 기후, 환경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전 세계가 직면했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이러한 위기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음
- 발제자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인류가 걸어온 발전 경로의 결과이며 인류의 성찰과 각성, 협력을 통해 극복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셨음. 반면, 현 상황은 협력을 통해 평화의 기반으로서 균형을 추구하기보다 각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 경제를 비롯한 전체 역량이 총동원된 힘겨루기 경쟁이 계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발제문에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생명안보 문제가 중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의 동북아 다자의 협력에 기반한 창의적 대안을 통해 접근해야 하며 그 대안으로 한중일 공동의 협력과 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셨음
- 군사, 환경, 기후 문제에 기인한 전 지구적 상황은 이제 인류 전체가 안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고 이를 위한 협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음. 나의 안전의 토대로서 모두의 안전을 위한 협력의 토대를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만들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

○ 한반도 평화와 윤석열 정부의 외교: 대중 탈동조화에서 미일 탈동조화

- 발제문을 통해 지난 1년간 현 정부가 추진했던 외교안보 정책이 개략적으로 평가되었음. 대체로 한일, 한미일 관계에 집중하는 ‘가치외교’를 표방하면서 외교뿐 아니라 경제 영역에서까지 능동적 주체가 아닌 수동적 객체로 전락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가짜 평화’를 대체하는 ‘진짜 평화’를 강조했지만 실상, 진정한 화해나 실익이 없는 ‘정상화’가 추진된 것으로 평가되었음
- 또한 북핵 위험, 중국의 부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기반한 자의적 신냉전 인식에 기반한 한반도 전략이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하기보다 위기를 증가시키는 상황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특히 전 세계적으로 대중국 탈위험화 전략이

취해지고 있는 것과 달리 대중 탈동조화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현 정부의 외교 전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

- 위기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한중관계의 관리, 국제질서 구축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군사 분야의 위기를 넘어 경제, 기술, 통화 등의 다양한 영역으로 갈등의 범위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외교 전략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와 적절한 방향의 전환이 요구됨

박상남(한신대)

- 국제질서에 대한 부정확한 진단은 잘못된 대응으로 이어져 국가적 재난 초래
- 미국 유럽 등 서구 선진국의 비중 하락과 중국 인도 등 신흥국 부상이 가져올 변화는 국제질서가 신냉전보다는 선택적 협력시대로 이행할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음
- 남기정 선생님의 주장처럼 G7의 약화와 신흥국으로 구성된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E7(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터키, 브라질, 멕시코)의 부상이 가져올 국제정치, 경제 질서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
- 미국을 비롯한 G7도 대중 탈동조화(decoupling)보다는 탈-위험화(de-risk)로 방향을 잡았다는데 한국정부만 냉전적 인식에 빠져있다는 남선생님의 분석은 시사점이 크다고 평가
- 현재 한국정부의 이분법적이고 단순한 국제정세 인식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가능성
- 한미일 삼각동맹의 위계적 분업구조, 군사압력 일변도의 대북 외교를 수정해 독자적이고 완충적인 지향점과 대외정책방향 재정립 필요
- 생명안보에서 시작하여 전통안보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한국의 독자적인 평화협력 로드맵 제시 필요
- 조한범 선생님의 한반도 평화의 입구를 형성하기 위한 창의적인 대안제시 필요성
- 조한범 선생님의 제안처럼 당면한 위기극복을 위해 국가주의적 대응을 넘어 한중일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평화시민운동 모색 중요
- 동아시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운동 어젠다를 선도적으로 제시할 필요
- 예를 들어 한중일 ‘탈 플라스틱 경제(미세플라스틱 위협 제거)권 창설’, ‘미세먼지 추방을 위한 동아시아 환경연대’ 등 생활 속에서 주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협력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귀한 자리에서 토론을 말도록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외교에 대해 평가하는, 의미 있는 자리에서 토론 역할을 맡게 되어 더욱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 발표문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간 외교안보활동을 매우 압축적으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발표문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관련 국정과제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만드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남북관계 정상화와 이를 통한 평화의 한반도 실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한다는 목표가 제시되었다고 요약했습니다.

2.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대북 제재, 한미일 3국간 공조, 북한 주민의 인권 인도적 상황 개선,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진화와 한일 셔틀외교의 복원, 인태지역으로의 외교지평 확대, 가치외교 파트너십 강화 등이 추진되었다.

3. 현 정부의 외교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상을 강화하기보다는 미일동맹의 하위 행위자로 편입되는 양상이라는 발표자의 평가는 G7 회의에의 참가로 만족할 수 없어 보인다. 오히려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구상하는 등 미일한 위계적 분업구조에서 벗어나 신 국제질서의 주체로 나서길 제안하고 있다.

4. 현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발표자의 입장은 크게 ‘신냉전’을 바라보는 입장차이에 기인한다고 본다.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은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에서 더욱 강화되는 양상이지만 과도한 평가는 이데올로기일 수 있다. 발표자께서 신냉전을 ‘허구’라 하셨다. 그러한 인식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보충설명을 바란다. 과거 이념을 기준으로 본 진영 간 냉전적 대립이 현 단계에선 기준으로 삼을 대립적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인지를 포함하여 설명되었으면 한다. 감사합니다.

□ 현 정부 대북정책의 특징 및 평가

○ 2023 『통일백서』의 주요 내용

- “비핵 · 평화 · 번영의 한반도”의 비전 아래, ①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② 호혜적 남-북 관계 발전 ③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 등 3가지 추진 원칙 제시.

- 중점 추진과제로 ①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②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 관계 정상화 ③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④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⑤ 국민 ·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 등의 5가지 과제 제시

○ 2023 『통일백서』의 특징

- 92년 발효된 남북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공식화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로 규정

: 한반도 정세 악화와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군사도발에 있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하는 그 주체가 북한 당국임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

- '북미' 및 '북미관계'를 '미북' 및 '미북관계'로 변경

: 남북관계보다 한미관계 강화에 중점을 둔 통한 북핵 위기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추진 전략으로 추정

○ “담대한 구상(Audacious Initiative)”의 평가

- 이명박 정부의 “비핵 · 개방 3000 2.0”이라는 평가가 일반적

: 이에 현 정부는 경제뿐 아니라 북한 체제안정과 연관된 군사·정치 부문 조치도 마련된 종합플랜이라는 점에서 업그레이드 버전임을 강조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아래 남북관계는 2008년 “박왕자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 중단, 및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인한 “5.24 조치”로 남북교류 중단 등으로 정리될 수 있음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특징 및 평가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특징

-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강조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²⁾을 전제로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으며 협상 과정에 일본, 한국 등의 동맹국들과의 실무 협력 하, 단호한 억지(stern deterrence)를 통해 대응

-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및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타격(grand bargain)과 상이

: 북한과의 외교에 더욱 적극적 태도를 취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인내와 상이

: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 및 top-down 방식과 달리 다자주의 및 bottom-up 방식 강조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평가

- 구체적 전략의 부재로 인한 사실상의 “전략적 인내 2.0”

: 북한 비핵화의 선제조치 시,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구체적인 조치 계획의 부재

-> 결과적으로 북한 비핵화의 동기 부여 실패

- 다양한 국내·외 문제로 인해 북핵 문제는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남

: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 문제와 더불어 북한의 인권 문제 강조

□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

○ 이명박-오바마(1기) 행정부 하 남북관계와 유사한 방향으로 전개

-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2.0”과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2.0”이라 평가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과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 아래, 남북관계 경색 및 악화 가능성 매우 높은 상황

○ 북한의 핵전력 상승의 영향

- 북한의 핵전력 상승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

○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와는 다른 남북관계의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담대한 구상”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업그레이드 필요

2) CVID에서 북한이 높은 수준의 반감을 보이는 Verifiable과 Irreversible이 삭제되었으나 기본적인 원칙은 동일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앞둔 국무회의에서 지금의 민생·안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와 야당 탓이고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라고 했다. 지난 23일은 “모든 외교 행위는 자유와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에 기반한다”라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비추어 보면 전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을 ‘가짜 평화’로 규정하고 이를 뒤집는 데서 자신의 대외전략의 정당성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비핵화와 평화선언, 종전선언을 위해 미·중·일·러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라는 ‘전략적 명확성’을 분명히 했다. 지난 집권 1년 차는 이런 외교안보정책의 기본 틀이 빠르게 성립된 시기다. 요약하면 미일동맹을 ‘가치동맹’으로 규정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가담함으로써 동맹의 틀로 한반도 안보와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동맹의 가입 조건은 한국의 “미일동맹의 하위 행위자로서의 편입”(남기정·서울대)이었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 미국은 중국과의 안보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아시아 관여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면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안보가 확보됐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현실은 벌써 중·러의 반발 등 윤석열 정부의 대외전략에 내재된 위기가 드러나면서 1987년 체제 이후 한반도는 전례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외전략은 첫째로 한국의 대외적 자율성을 축소시켰다. 지정학적 강대국에 낀 한국은 역대 정부의 북방정책에서 보듯 열강과의 관계에서 강대국에 의한 간섭 배제와 자율성을 극대화하려 노력해왔다. 그러나 한국이 인·태전략에 연루됨으로써 미·일의 간섭 가능성을 높이는 대신 대외적 자율성의 제약을 초래했다. 미중 경쟁의 심화로 대만전쟁 발발 시 한국의 전쟁 연루 가능성은 더 높아졌고 이는 한반도 위기의 직접 원인이 된다.

둘째로 편 가르기 외교다. “경제주권이나 안보주권의 문제는 ‘친구’만 믿으면 된다고 하고 중국이나 북한과 대화하거나 협력하는 것은 순진하게 ‘적’에게 ‘선의’를 기대하는 것이라며 비판하는 셈”이다(김성경·북한대학원대학교). 이는 윤석열 정부의 대외전략에서 비롯된 결과로 주요 정치·경제적 파트너인 중·러에 대한 협상력(leverage)의 포기나 약화로 이어진다. 최근 대만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외교부에 직접 항의하는 등

중·러와의 상황은 더 악화되는 상황이다.

셋째는 일방적 동맹과 무력 과시에 의존한 대외전략으로 한반도 위기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반면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거나 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예방 외교 능력의 부재”(문정인·연세대)를 맞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북핵 위협에 대해 "(G7)모두가 핵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북한의 불법 행동을 규탄했고 제재 레짐이 충실하게 이행되면서 한국의 안보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과의 강대강 전략은 지난해 이미 시작됐고 외교적 또는 다자적 해결의 창구는 제한돼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외전략의 핵심은 동맹 편승이다. 하지만 역사는 한반도가 19~20세기 대외적 자율성을 포기하고 특정 강대국에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할 때 파국을 맞았음을 보여준다. 19세기 조선의 ‘안보우산’을 자처한 청의 몰락과 ‘거중조정’을 약속한 최초의 근대조약을 맺은 미국이 가장 먼저 조선을 버린 일, 헤이그 평화회의 참여를 보장했던 러시아가 이를 파기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체스판의 졸(卒)’로 전락한 한반도의 비극적 운명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미중 간 안보 경쟁이 격화되면서 한반도의 대외적 자율성이 방기되고 이는 다시 남북평화의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평화를 위한 감시 노력이 필요하다.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여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 그리고 국익에 대해 되새겨 볼 수 있었다".

대내적 문제(남북문제)가 한국의 대외 관계를 결정짓는다.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한반도 평화적 프로세스가 동맹과의 관계를 모호하게 하면서 러중과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게 했지만 남북문제의 해결을 가져오지 못했다. 한국정부가 주도권을 쥐면서 한반도 평화를 살려 나가는 선에서의 미중러일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 안에서 한국 정부는 전략적 자율성을 추진했지만 느슨한 동맹과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소외되는 상황. 그리고 북한의 북미 중심의 대화를 통해서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문제의 해결에 효용성이 없던 한반도 평화적 프로세스를 대체하려 한다. 그것은 동맹 관계의 강화를 통한 남북문제의 해결이다. 동맹을 통한 남북문제의 해결이다. 이 때문에 한미, 미일 관계는 물론 쿼드를 드러낸다.

하지만 이것은 동맹체계 내에서 분업화된 계열 아래 이른바 전위대 역할로 국한-전략적 자율성이 크게 제한된 상태. 그리고 동맹에 따른 편 가르기 외교로 러중 관계가 역대 정부 이래 최악의 상황에 놓이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대외관계가 어떻게 남북문제에 적용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제의가 나와 있지 않다. 앞으로의 과제다.

하지만 전망은 가능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프로세스에 의한 대북 제안이다. 북한 끌어내기일 것이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자유번영은 상호 공존할 수 없다.

황재호(한국외대)

- 현 정부가 미국에 올인하는 상황에서 한중 관계의 위상과 성격이 변하고 있다. 우리 외교의 큰 그림 안에 중국은 어디에 있는가? 지난 정부가 친중이라면 이번 정부는 반중(反中), 혐중(嫌中), 비중(非中)인가, 아니면 그래도 화중(和中)인가. 한국에 경제·안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을 고려해 적어도 현상유지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국, 일본, 유럽 등 모두 각자의 국익에 기반한 대중정책이 있는데, 한국도 한국적 상황을 반영한 대중정책이 있어야 한다.
- 우리 입장을 너무 조급하게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강대국들은 으르렁대다가도 손바닥 뒤집기를 잘한다. 1972년 7월 20일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일본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지난 2월 초 중국 정찰풍선 사태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이 취소된 이후 3개월 만에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5월 11~1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전격 회동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며, 미·중이 적대적 관계를 전환한다면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다.
- 자극적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 지난 4월 27일 미국 의회 연설에서 윤 대통령의 장진호 전투 언급은 미국에 강하게 어필하고 싶은 마음 때문임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한미 양국 간 유대감을 강조할 수 있는 사건을 인용했다라면 나았을 것이다. 제3국이 관련된 논쟁적 사건 인용 시 언젠가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 민감한 사안들은 가능한 한 원칙 위주로 발언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를 남북 관계와 비교했다. 대만은 중국이 가장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안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 그 이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도 꼭 해야 한다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같은 미국식 표현이 아니어야 한다. 한국식 외교 랭귀지를 개발한다면 민감성을 낮추고 자율성을 확보하며 국익 견지에도 유용하다. 그럼에도 중국이 우리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면 그때는 우리도 강하게 대응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먼저 자극할 필요는 없다.

메 모

메 모

평화2.0포럼 in 광주

PEACE FORUM 2.0

G W A N G J U

주최 평화재단, 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조선대 동북아연구소, 한신대 한반도평화학술원

비매품